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2025.4.22.(화)	보 도 자 료 담당: 정책위원회연락처: (02)6788-2606
---	---

민주당, 2025년 추경안 심사방향 - 꼼꼼한 심사와 함께 민생지원 사업 등 증액 추진 -

-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경기침체와 민생난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적시에 추경을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4월 21일에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낙장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경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 일례로, 소비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 특히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하여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AI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5. 4. 22.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